

민주,尹정부 세계개편안 제동

“재벌·초특급부자 민원해결 정부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계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국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전체적인 과세 기준이 낮다며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이때 정부가 해야 될 정책은 무엇일까. 당연히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재정을 확충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면대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를 하겠다고 한다 그 근거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글로벌이 어느나라를 얘기하는 글로벌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 반대 “0.01% 재벌 감세 의도”
주식양도세 비과세 ↑ “0.1% 울트라개미용”
다주택 중부세 누진제 폐지엔 “동의 못 해”
“역시 MB 시종2 부자감세...상임위서 수정”

▲법인세 감세 반대 “0.01% 위함...고세율로 해외 나간 기업 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2%로 낮춘 데 대해선 “법인세의 실제 실효세율은 17% 내외”라며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높아보이나 미국은 소위 주세(州稅)가 거의 8~10% 빠져있는 세금이다. 미국 지방정부 세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법인세도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과표구간 5억원 이하 중 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하는데 대해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묻는다. 대한민국에 과표 기준 매출 3000억원 이상이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도”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3000억원 이상

의 과표 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개에 불과하다. 전체에서 보면 0.01%”라며 “이런 기업에 재벌 감세를 해주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법인세 감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식양도세 비과세 ↑ “초특급 울트라개미 위한 전형적 부자감세”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0억원으로 높인 데 대해서도 “100억원의 주식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층이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 0.1%내외”라며 “이론적으로 보면 삼선전자, 현대자동차, SK 주식을 각 90억원씩 갖고 있다가 양도하더라도 이젠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 초특급 부자를 위한 전형적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늦춘 데 대해서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지는 취지로 오랜 논의 끝에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그렇게 하는 게 시기에 훨씬 더 낫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 3년 이상 준비 끝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는 제도”라며 “예정대로 금융투자 소득세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주식양도세는 마찬가지로 비과세 10억 기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토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개미투자자들이 원한다고 했는데 그 개미는

아마 초특급 울트라 슈퍼 개미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벤처창업·스타트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높인 데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부자감세 성격을 갖게 된다”며 “IT기업의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는데에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주택 중부세 누진제 폐지 제동 ‘조세 통한 사회적 환류 필요’

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중부세) 증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꾼 것에도 이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서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까지 (감세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여러가지 인프라가 쌓이면 과도하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추가적 불로소득이 쌓이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을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처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조세제도를 통한 사회적 환류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중부세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을 이유로 기업상속공제 범위를 넓히는데 대해서도 “기업상속공제제도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당도 동의하지만 그 (매출 기준) 액수를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한꺼번에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느껴진다”며 “따라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MB 시종2 부자감세...상임위서 잘못된 것 수정”

다만 주거비 월세 세액공제 등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과 유사한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협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고령층 및 장기보유자 중부세 납부 유예제도는 우리가 여당 때부터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근로자 부담 경감을 이유로 소득세 과표 하위 구간을 상향한 데 대해서도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수을 의사를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유예한 데 대해서도 “우리당도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가상자산 세금 부과를 1년 유예하자고 한 바 있다”며 “1년 혹은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을 놓고 어느정도가 적절하냐는 판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 제도화 후 세금부과’의 순서가 타당하다”고 호응했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세계개편의 기조는 전형적인 소위 MB 시종2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특히 우리 사회의 초상류층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벌과 부자감세에 초점을 맞춘 이 세계개편안은 철화하고 고유가, 고물가 시기 다수의 국민과 서민들의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재정 지출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계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부분이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일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을 거쳐서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민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그 잘못된 취지를 (수정) 반영해서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계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부분이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일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을 거쳐서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민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그 잘못된 취지를 (수정) 반영해서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법인세, 25%→22% 인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걸어온 주거 사다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민간 주도 25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또 세계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현행 28%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이고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해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으로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도로·교통·우편 요금 올레 말까지 동결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 통과 △30조원 새출발기금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 △대출 기간 연장·채무 조정 △내지 바꾸쳐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8%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겠다”며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해 중소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기업이 정당하게 재고를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다”며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전환경연구원(세입예산안 81.61% 약 13억, 세출예산안 12.66% 약 14억) 등으로 편성됐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환복위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1일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제4차 회의에서 전라북도 복지여성 보건국, 환경복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각 국별 추경예산안은 복지여성국(세입예산안 8.16% 약 1.822억, 세출예산안 8.93% 약 2.457억원), 환경복지국(세입예산안 4.43% 약 1.73억원, 세출예산안 4.35% 약 2.37억원), 새만금해양수산국(세입예산안 6.90% 약 1.28억원, 세출예산안 7.62% 약 2.517억원),

/김경수 기자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히”

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음식 익혀먹기 등 6대 수칙 실천 권고... 피서지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전북도가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 등의 철저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70건 환자는 1,064명이며, 환자의 33%(21건, 348명)가 여름철(6~8월)에 발생했다. 주요 원인균으로는 캄필로박터 제주나,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으로 세균성 식중독이 주를 이뤘다

이에 전북도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6대 안전수칙 실천을 권고했다

6대 수칙은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은 속까지 익혀먹기, △물은 끓여 마시고 정수기는 점검·관리하기, △보관온도(냉장 5°C이하, 냉동 -18°C이하) 지키기, △식재료 및 조리 기구 세척·소독하기, △식재료별 조

리기구 구분하여 사용하기 등이다 특히 음식점 종사자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신발과 앞치마를 외부나 화장실에서 착용하지 않고, 설사·복통 등 장염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김밥 등 조리식품의 포장·매달 판매 시 소비자가 쉽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과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7월 말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휴가지 주변 조리·판매업소와 보안식 취급 음식점 등 170개소와 식용유류·혼합음료 제조업소 29개소의 위생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김진표 의장, 국회 입법차장에 박장호... 사무차장 흥형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박장호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흥형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장호 차장은 입법고시 13회로 1995년 국회사무처에 들어와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에서 근무

했다 흥형선 차장은 1995년 입법고시 13회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쳤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은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영된 평가에 기반한 국회 인사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

공공형 어린이집 도내 25곳 ‘재지정’

도 공보육 발전 발판

도내 공공형어린이집 25개소가 재지정됐다 유효기간이 만료됐던 모든 시설의 통과로 전북도의 공보육 발전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2,300여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금년 재지정된 25개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99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교사인건비, 유아보육연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우수한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기준에 따라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5개 전 시설이 재지정 평가에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앞으로도 우수한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북 지역의 인구·보육여건·주인 수요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했다

강영식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이번 지방이양을 계기로 전북 지역 여건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이어나갈 것이며, 역량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하반기 신규지정 공모절차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해 총 106개 규모로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도의회 “도 자봉센터 관리·감독 책임져야”

행자위 하반기 업무보고

전북도의회가 이른바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북도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에 대한 전북도의 강한 책임과 함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협력국 등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지역 정치권에 큰 파장과 함께 관련 직원 구속 사태까지 번지고 있는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4월 다량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이 발견돼 센터장을 지낸 전직 공무원 A씨가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성수 의원(고창)은 “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무기획과와 자원봉사 센터장은 선거 개입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 기관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에 동조했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센터장 임명과 관련, “사회단체 경력 10년이상이라는 기준에 JC(청년회의소)와 비르게살기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의 경력까지 인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며 전북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지난 2월부터 대의협력국장을 비롯해 대외국 부서장들의 장기간 공석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인사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은성 인사가 아닌 전문성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